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46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역동적 지역경제의 실현방향 및 과제

김봉한 | 공주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충남은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을 전자 및 자동차 산업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기 시작하여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해소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충남의 지역경제는 급격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 중국경제의 급부상,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국 · 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남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충남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간주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추진전략과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충남 지역경제의 과제

그동안 충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고, 전자 및 자동차 등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의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증진되었다. 그러나 충남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

지역산업구조가 2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충남의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농림어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충남의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47

데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남지역에서의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충남의 농림어업과 서비스산업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치의 창출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

충남은 최근 수년간 GRDP의 전국비중인 7.8%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창출 비중(2004-2005년 5.0%)을 보여주는 등 일자리 창출능력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3. 전략산업 추진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및 시회간접 자본의 확충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해소

산업화가 천안·아산 등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5. 인구의 적정 성장률 유지

충남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Ⅲ. 충남지역발전의 목표 및 추진과제

1. 경제성장의 동력 확충

1)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별 혁신체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기업의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48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유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성장주도 산업의 고도화

충남 고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고도화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유지시키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지역의 가용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원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4)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공급 확충

충남 소재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력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기업들의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고등교육정책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5) 산업의 클러스터 활성화

충남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의 거점 클러스터가 여타주변지역으로 발생하는 전후방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변 지역에 중소규모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외국인 투자 유치

선진기술 습득과 생산성 효과가 큰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충남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업활동의 기반시설로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충남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신규기업의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내 균형발전 추진

1)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산업과의 연관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49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해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농립어업부문의 종합대책 실시

한·미 FTA 등으로 장기적으로 농업 개방이 불가피하여 충남의 농업 쇠퇴가 가속될 전망이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큰 자동차 및 전자 관련 소재·부품생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 인구의 크기와 구조는 유효수요를 결정하고, 우수한 노동의 공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 능력 제고

충남의 향후 제조업 경쟁력을 선도할 연구개발능력이 미약하고 R&D 투자가 부진하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시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R&D 개발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0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전략과 과제

송미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개발팀장

Ⅰ. 문제제기

이 글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실천적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여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정책적 논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현장의 시도 속에서 공통된 특징을 파악한 후 , 셋째, 끝으로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대한 행동 전략과 과제들에 대하여 고려해 보기로 한다.

Ⅱ.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정책적 흐름과 현황

1. 농촌 만들기 정책의 전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농촌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환경 수준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대부분 농촌지역에 도로가 정비되어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택의 절대적 낙후 수준도 크게 개선됐다. 또한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마을의 수가 300개를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농촌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하드웨어 정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사업 추진 방식에서 중앙정부의 하향식 개발행정이 고착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주민역량이 약화됐다. 셋째, 주민 역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군이 집행하는 사업의 수혜자일 뿐 그 기획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2. 참여정부의 농촌정책 :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1

〈표 1〉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연대별 변천과 주요 내용

구 분	연 대	주요 내용	추진 주체	개발 방식
지역개발 사업	1950 ~ 1960	– 주민 조직화 – 지도력 배양 – 자원 조성 및 소득 증대활동 – 생산기반 정비 –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지도원, 주민	상향식 개발
농촌 새마을운동	1970	– 새마을지도자 육성 – 주민 조직화 – 생활환경 개선 – 자원 조성과 소득 증대활동 – 생산기반 정비	정부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과 혼합형)
농촌지역 종합개발	1980	– 도농통합 개발 – 중심도시 육성 – 배후마을 개발 – 지역산업 개발 –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개발 – 환경 개발	지자체, 주민	주민의사 수렴
정주생활권 개발	1990	– 중심마을 개발 – 주택 및 도로 개발 – 상하수도 개발 – 환경개발 – 마을 공공 및 편의시설 개발	지자체, 주민 대행기관	주민의사 수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켜 풍요롭고 매력있는 지역으로 변환시키자는 접근으로, 지역주도, 주민주도의 대원칙이 강조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목표는 쾌적한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로 구체화 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과제로서 고품격 생활공간,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진행 방식은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지역–지자체–중앙정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기획, 지역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2

〈표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사업 모델

기본모델	특 성	추진 주체
산업형	생산활동 활성화 및 지원이 테마	– 향토산업형, 첨단산업형
교육형	교육활동이 발전의 주요 테마	– 국제화형, 한국전통형
정보형	지역의 풍부한 정보인프라 활용	– 정보화마을형, U-city형
생태형	양질의 환경, 생태가 주요 테마	– 수변경관형, 도보자전거형
전통형	전통, 역사유물, 유적이 테마	– 고도형, 설화민담형
문화형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	– 예술인촌형, 축제형
관광형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 자연관광형, 예술관광형
건강형	스포츠시설 등을 통한 심신 단련	– 스포츠형, 휴양형
가족형	New Urbanism, 가족공동체 테마	– 3세대형, 유아여성편의형

자산 조사, 지역자원 활용 등을 주민참여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며, 행정자치부는 건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에 추진하는 주관부처별 중앙기획 공모전과 병행하여 '9개+알파'유형의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우수계획을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방식은 기본 모델을 샘플로 하여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 공모에 도전하여 우수계획 30여 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예산을 지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계획 선정의 기준은 합당한 모델의 선택 및 사업기획,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등이다.

참여정부는 최근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면서 기존의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 복합생활공간이란 농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부족한 인구' 문제로 보고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고 혹은 전 국민을 상대로 농어촌 정주에 대한 의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통칭한다. 이에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 정주공간 조성, 이주단계별 정주 지원, 농촌정책의 추진체계 재편 등의 정책 묶음으로 구성된다.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3

Ⅲ.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현장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공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진단에 필요한 DB 구축, 거친 수준의 자기진단에 따른 현안 발굴과 계획 수립, 해당 지역에 적합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발굴 등의 엄격한 지역진단과정을 거쳤다. 둘째, 현안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으며, 셋째,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 과정을 거쳤으며, 넷째, 작은 사업부터 출발하였으며, 다섯째 지자체 공무원, 외부 유입 주민 들의 선도적 리더가 있었다는 점이다.

Ⅳ.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실천 전략 설정과 과제

1. 중앙정부의 정책 통합성과 다양성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과 정책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을 편의적으로 분할하여 부처별로 정책사업 확보 경쟁 양상이 재현되어서는 곤란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도시의 경우는 특정 문제나 사안을 두고 주민들 주도로 사업을 벌이는 방식의 issue network에 의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촌의 경우는 자치단체와 리더의 동기부여에 의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의 policy network에 의해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역량 증대와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

3.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참여 주체 양성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사람의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지방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이 요구된다.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4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재완 | 공주대학교 교수

Ⅰ. 고령화 현황과 전망

우리 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현재 9.1%이며 2010년에 10.9%, 2018년 14.3%, 2050년 37.5%의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으로 이어져 2005년 약8명당 노인1명부담에서 2050년에 1.4명당 노인1명 부담으로 나타남.

2005년 현재 충남도의 노령인구 구성비는 14.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간 노인인구 구성비를 보면(2005년) 서울 71.%, 울산 5.2%로 낮은 반면, 전남 17.5%, 충남 14.4%, 경북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음
- 또한 노년부양비도 전남 27.3%, 충남 21.5%, 경북 21.0%로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령인구구성비를 보면 군부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청양군, 서천군 등 과소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부여군도 초고령사회에 근접해 있음
- 시부도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음

Ⅱ. 저출산 · 고령화의 파급효과

저출산 · 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부정적인 문제과 긍정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155

〈표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

구 분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	
내 용	- 사회전체의 부담증가 - 노인의 사회적 소외/배제 - 세대간 갈등과 사회적 통합 저해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 정보격차 등을 통한 계층간 노인계층내의 양극화 심화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 노동생산력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 - 저축률 하락 - 세입기반 감소 - 공공재정악화	-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위협 - 의료 및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 -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증가	- 건전한 새로운 노인문화 형성 - 노인의 정치적 압력집단화 - 노인의 일반적 경제력 향상 - 실버산업의 발전

Ⅲ.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

1. 범정부적 정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대책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충청남도 특수(독자)사업 방안

1)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조례제정 및 제도 정비

저출산, 고령화문제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이해 제도적인 근거 마련해야 한다.

3) 가정·지역·학교·기업·정부(행정)간의 연계 체계 구축 운영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6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각 주체들간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보육 및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보육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며 특히 시설확충을 통해 서비스 센타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5) 특수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 지역사회중심의 저출산 · 고령화대책을 위한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및 운영
- 세대간 세대내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노-노케어, 고령인력을 활용한 양육프로그램 실시(어린이집과 연계, 지역아동센터 연계, 방과후 또는 주말 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로 「24시간 안심서비스 프로그램」 추진
- 소지역사회의 모임의 광장 확충 및 활성화
-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 운영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도입,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량 실버마크 제도 도입, 은퇴자마을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7

〈표 2〉 범 정부적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구 분	내 용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 영유아보육 ·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	○
	– 방과후 학교 확대	○	○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
	– 입양아동 양육지원	○	○
	– 보육시설확충	○	○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
	–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	○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	
	– 육아휴직지원 강화	○	
	–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	○
	–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강화	○	○
	–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조성	○	○
건전한 미래세대육성	– 아동 ·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
	– 아동 ·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퇴직연금제도조기 정착, 개인연금활성화	○	
노후건강관리 및 요양보호 기반확충	– 사전예방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	○
	– 노후의료보장 강화 및 노인운동 활성화	○	○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노인요양인프라 구축	○	○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체계 구축	○	○
노인사회참여 기반 조성	–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	○
	– 노인여가, 문화활동 지원	○	○
	–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조성	○	○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 안전한 노인주거공간 확보	○	○
	– 고령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	○
	– 농어촌 노인복지기반 확충	○	○
여성고령인력 활용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지원	○	
	– 연령 차별금지 법제화	○	
고령친화산업육성	– 고령 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고령 친화제품기술개발)	○	○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8

충청남도의 건강한 자연환경 만들기 전략과 과제

정회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장갑수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충청남도 환경관리여건의 변화

1) 환경질과 관리여건의 지역간 격차

천안, 아산, 서산, 당진군 등 북부권은 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심화. 특히,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대규모 오염시설에 의한 각종 VOC 및 악취물질이 환경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여, 논산, 금산군 등 남부권은 금강유역권으로 수질오염원의 규제와 금강수질개선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2) 소규모 오염원의 증가에 따른 문제

수도권 인접지역과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된다.

3) 행정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도로 등 개발활동의 증가에 따라 난개발 및 환경오염 부하가 높아질 것이다.

4) 신 성장동력 산업의 입지 증가

충청남도는 IT, BT 등 첨단산업의 양호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환경의 패러다임에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Ⅱ. 충청남도 환경여건 분석

충청남도는 풍부한 연안환경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부터의 환경오염원이 유입되는 위협요인을 지니고 있다.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59

〈표 1〉 환경여건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양호한 농지 등 자연환경 · 연안환경 및 자원 풍부 · 다양한 지역문화 보유 · 금강 삽교천 등 풍부한 수자원 · 입지적 비교우위성	· 수도권의 환경오염 광역화 · 각종 개발압력에 의한 환경훼손 · 지역내 불균형 심화 · 농촌지역 환경오염 우려 · 소규모 산업단지 광역적 분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도의 개통 · 환황해경제권의 성장블록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청의 건설 · 첨단산업지대로 전환 가능	· 수도권으로부터의 환경오염원 유입 · 지역의 자족성 약화(수도권에 편입) · 지역의 특징적 문화 소멸 위협

Ⅲ. 충청남도의 건강한 자연환경만들기 기본방향

1. 생태-경제 공간체계의 구축과 보전

산, 하천, 연안 등 주요 생태요소를 보전, 복원하고, 이들 상호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태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요 생태축을 보존하고 복원하여야 한다.

2.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쟁력 강화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을 연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한다.

3. 환경복지사회로의 발전모델의 정립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 등 쾌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60

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환경친화적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4. 도민과 함께 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체계의 구축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관리 계획과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창출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공간정보 및 도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환경지도로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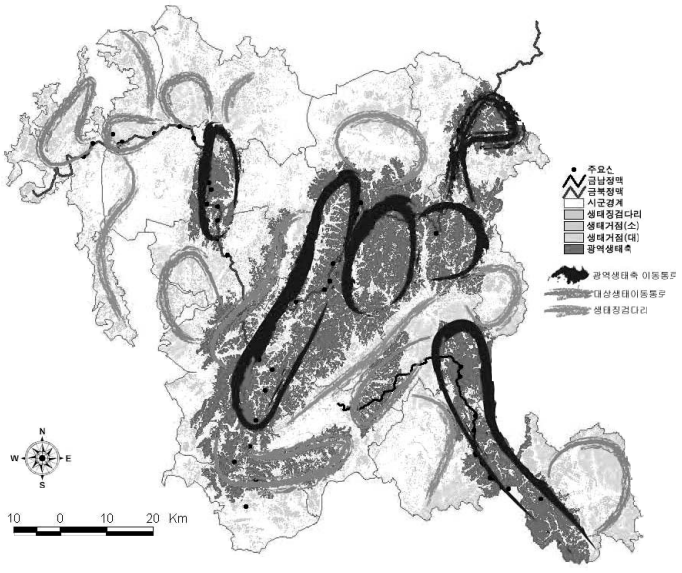
Ⅳ.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1. 광역생태축의 보전 및 관리

1) 생태축의 조성

대둔산-계룡산-부소산, 성거산-칠갑산-오서산-백화산을 잇는 금남-금북정맥 광역생태축을 토대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훼손지역의 복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2) 서해연안의 대기오염 관리방안 수립



충청남도 산림생태네트워크 개념도

열린 충남-겨울출 2007.1.19 1:13 PM 페이지 161

충남지역 서북부 서해연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6개소(당진, 보령, 태안, 서천), 대산석유화학단지, 아산국가산단, 제철단지는 향후 주요한 대기오염원으로 광역화가 우려되므로,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당진-서천광역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의 광역화에 대비한다.

2. 도시광역 환경계획의 수립과 추진

1) 신도시의 환경관리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청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신도시와 산업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광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한다.

2) 중소도시 환경관리의 강화

정보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중소도시의 환경개선과 환경친화적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3.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1) 생태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환경관리 개선

개별입지 공장을 계획적 산업입지로 유도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리체계 구축한다.

2) 서해연안 및 금강하구역의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추진

양호한 연안생태자원 및 해양수질(1등급)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자연공원 및 보호구역 지정, 생태체험관광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생태경관을 지닌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효율적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3) 하천수질관리를 위한 총량관리의 효율적 시행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군별 배출원 오염부하량 관리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도모한다.

4) 지역소득 창출형 환경관리대안의 모색

노령화 사회 및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여가활동수요는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관광 또는 친환경 농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용함으로 지역의 소득창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제도의 정착

환경친화적 지역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